

이신화 (2022 10) “북한인권과 국제협력”

본 세미나는 (사)정보경영연구원의 지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인권 문제는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 건’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해 가장 leverage를 가질 수 있는 의제이자,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수단이다. 특히 북한이 미국과 마주앉아 (비핵화가 아닌) 군축을 논의하려는 의도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고, 핵국가 법제화를 선언한 시점에서 북한이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인권문제를 통해 협상 공간을 키울 전략을 국제공조를 통해 짜야한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탈정치화·초당화해야한다. 일단 (국내에서) 초당적으로, 탈정치화한 (북한인권 관련) 컨센서스를 이루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선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도 여러 이슈에 있어 크게 분열 (devide)되어 있으나 북한 인권 문제를 앞에 두는 것에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막상 한국 국회는 이 문제에 있어 더더욱 극명한 분열양상을 띠고 있다. 역설적인 것은 북한인권 문제는 사실 리버럴 가치인데, 한국의 경우 민주당에서 남북 관계 특수관계를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논리하에 북한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았다. 그렇다고 북한이 이를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온갖 비방 및 자의적 대응만을 일삼았다. 지난 정부가 너무 많이 양보하여 북한이 spoiled되고 대담해진(embolden)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상황을 회복해서 북한과 무언가를 하는 것이 그 시작점부터 너무 힘들어진 실정이다.

10월 6일 47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정부가 신장위구르족과 이슬람 교도의 인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한 특별 토론회 결의안이 부결된 것은 국제인권을 위한 그 자체로도 우려스러운 일이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동력을 생각할때도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당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등 총 17개 국가가 찬성했지만 19개국이 반대, 11개국이 기권했다. 기권까지 포함하면 30개 국가가 찬성을 안 한것인 찬반 수치도 놀랍고, 이슬람 교도의 인권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반대나 기권을 한 것도 매우 놀라운 일이다. 경제적 자원, 즉 중국의 경제력이 영향력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의 방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간 연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다. 국제평화와 안정 및 인류애를 위해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계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제적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그 진입점(entry point) 중 하나가 북한인권 문제여야 한다.

덧붙여 미국 측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 정권에 굉장히 명확한 경고가 될 것이고 북한 주민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특사임명은 유럽 및 유사입장국들 사이에 우크라이나 사태나 에너지 위기 등으로 우선권이 밀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재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욱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사입장국들간 자유민주 연대를 강조하는데, 민주주의의 역사가 인권발전과 궤를 같이하는 점을 고려할 때 특사임명은 좋은 상징적, 실질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미국 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과 행정절차로 인해 특사임명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바로 북한인권 문제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같은 군사적 위협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가 북한인권에 대해 얘기하는데, 아무도 북한인권이 정확하게 뭘지에 대해 모르는 게 문제"라며 "북한인권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제도화를 통해 국제 컨센서스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어떤 성향의 정권이 들어오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소위 '마지노선'인 북한인권 문제가 무엇인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human rights language/situations), 유엔 안팎에서 국가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인권유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오랜 경험과 헌신을 지닌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관학 협력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